노후화된 여수산단 산재 방지 대책 논의 본격화

14일 국회서 산업재해 방지 토론회
종합안전진단·노후산단 특별법 거론
현장 노동계 목소리 적극 수렴 필요

노후화된 시설에 안전 의식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폭발·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는 여수국가산단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기업, 학계 중심의 토론회에 머물지 말고 산업현장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노후 국가산단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 주최로 오는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6년 간 발생한 안전사고와 폭발·화재사고가 50건이 넘고 희생자도 20명이 넘는데도,현장·기업의 안전의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 근본적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산단에서는 올 들어서도 지난 2월 11일 여천NCC 여수 3공장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8명의 작업자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2월에도 산단 내 유기화학제조업체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여천NCC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유기화학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무려 109건에 이르는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었다.

여기에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20건의 안전사고로 14명이 숨졌고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0건의 화재사고로 5명이 숨졌다는 게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토론회에서는 ▲노후 국가산단 종합안전 진단 필요성 ▲여수화학재난방재센터 조직·기능 개선 방안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지난 2013년 대림산업 폭발 사고 이후 만들어진 여수화학방재센터의 경우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모여 있으면서도 특정 대응 방안에 대해 기관들의 협력 관계가 모호했던 점을 들어 방재센터 내 기관들의 지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송창영 광주대 교수, 이윤호 LG화학 여수공장 상무이사 등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 등의 토론 자리도 마련된다.

노동계 목소리를 같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장,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논의의 경우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까지도 지난 2월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끊이질 않는 산업재해에도, 노동자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노·사·정 간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수산단 사고 대응 훈련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회의도 열린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22일 여수에서 관련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대책회의를 연다. 비슷한 시각, 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에 따른 대응 훈련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실천력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쌀값 안정 위해
과잉물량 시장격리 강력 촉구

전남도가 최근 산지쌀값이 19만 6000원(80kg당)대로 떨어짐에 따라 지난해 과잉생산 물량과 산지 재고물량을 조속히 시장격리 하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곡물가격이 오름세인 반면 쌀값은 내림세를 보이며 20만 원 이하로 떨어져 경고등이 켜짐에 따라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번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세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지난해 27만t이 과잉생산 됐지만 정부에선 20만t만 격리를 계획한데다 그 시기도 12월 말로 늦어 쌀값 반등에 역부족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산지 쌀 재고량이 전년보다 50만여t이나 많고, 이 때문에 지난해 수확기보다 1만7000여 원이나 떨어진 상황"이라며 "특히 쌀값은 그 특성상 쉽게 내려가지만 다시 오르기는 쉽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 농정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 차원의 시장격리 확대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 선정

광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2022년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고용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는 지난해보다 12% 증액됐으며 광주시는 시비 8억4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9억을 투입해 11대 전략산업군 기업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2개 프로젝트,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83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수요-공급 균형기반 일자리창출 등 2개로 구성됐으며,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혁신추진단이 총괄하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 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9개 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는 11대 전략산업 유망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우수인재 연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R&D 기획 및 사전 실증, 신기술 도입 및 융복합,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등 5개 사업을 진행한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수요-공급 균형기반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업무 멘토링, 청년 창업 아이템 구체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송권춘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변화와 연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적기에 발굴·지원해 기업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인지도자대학 입학식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제40기 노인지도자대학 입학식이 5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전라남도 노인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 내빈을 비롯해 입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지역 현안사업 새정부 국정과제 채택 총력전

조인철 부시장 인수위에 건의서
TF 구성 실행계획 수립

광주시가 핵심 현안사업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일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실무진들에게 지역의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이들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부시장은 이날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경제2분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실무진들을 만나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미래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국제 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에 대한 국정 과제 반영 건의서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새정부 국정과제 대책 TF를 구성하고, 당선인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시는 특히 중앙부처의 지역공약 검토 작업 일정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찾아 지역공약 반영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까지 공약에 대한 국정과제 채택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수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모든 지역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조인철 부시장은 "당선인이 수차례 광주를 방문해 약속한 공약들이 모두 실현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등 지역공약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도 6일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하고, 7일에는 인수위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여수 승월 등 11개 마을 선정
전국 최다…사업비 71억 확보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11개 마을이 선정돼 총사업비 71억원을 확보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용수·생태계 등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 등의 농업환경 보전 인식을 높이고,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0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가져왔다. 지난해 전남에서 4개 마을이 선정된 데 비해 올해 3배 가까운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 마을은 여수 승월, 해남 신기·태인, 해남 연자, 고흥 서호, 보성 남양·사곡, 보성 마동, 보성 자세, 무안 곡지, 무안 신리, 화순 청용·대비, 영암 천해 등이다. 앞으로 5년간 마을당 6억5000만원씩 지원해 농업환경 보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연도별로 1년 차 5000만원, 2~5년 차 각 1억5000만원씩 투입한다.

연차별 사업으로 1년 차에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5년 차에는 환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비료투입 저감, 농약 쓰지 않기, 농업용수 수질개선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환경보전 활동을 중점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